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넘어서 좌파 계급정치

87년 민주화 이행 이후 노동정치 평가와 2024년 총선 이후 계급정치의 가능성*

권영숙**

이 글은 87년 민주화이행 이후 민주주의하에서 노동정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비과학적이고 모호할 뿐 아니라 계급성을 담지 못하는 기존의 ‘노동자 정치세력화’ 개념을 폐기하고 ‘노동계급정치’라는 개념으로 대체할 것을 주장하며, 정치운동전략으로서 계급적 노조운동과 좌파의 조직적 정치적 결합을 제시하고 있다. 그동안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과정은, 첫째 ‘민주’와 ‘진보’, 그리고 ‘좌파’의 3가지 분파 개념들의 모호한 연합과 중첩 속에서 정작 ‘좌파’의 개념 및 주체는 축소 삭제되고 있고, 둘째 정치세력화를 주도한 민주노조운동은 ‘노동자 정치세력화’라는 이름하에 의회주의와 조합주의를 결합한 흐름으로 일관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이로 인해 노동계급의 조직화로서 노조와 계급적 노조운동을 견인하는 지도력으로서 좌파의 결합이 미약한 가운데 ‘계급형성’이란 과제는 갈수록 상실되었다.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사실상 ‘노조의 정치세력화(즉 현존 조직노동의 정치세력화)’와 등식화되었고, 이는 현존 민주노조운동의 성격과 한계를 그대로 안고 있었으며, 계급보다 ‘노동자’를 강조하면서 계급적 정치적으로 자유주의 정치로부터 독자성을 정확히 담보할 수 있는 프레임이 아니었다. 2024년부터 이어지는 선거의 해를 앞두고, 노동자 정치세력화라는 이름하에 자유주의 세력인 민주당 외부에 ‘노조’가 주도하는 진보연합정당을 만들어 제2의 민주노동당을 재연하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좌파계급정치라는 개념 아래 정치적 실천을 구체화할 때에야 자유주의 헤게모니로부터 독립이라는 목표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와 노동계급의 정당정치에 대한 비교사적 시각과 이론적 검토를 통해서 노조정당과 좌파정당이라는 두 역

* 이 글은 애초 학술논문으로 쓴 것이 아니며, 학계에서 통용되는 학술논문의 형태와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자 하는 독자들은 굳이 읽을 필요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 글은 한국의 노동계급정치의 개념 정립을 위해 비교사적인 관점에서 여러 이론적 논거와 사례에 기대고 있으며, 동시에 한국의 노동조합운동과 좌파의 결합을 위한 실천적인 조언과 제언을 담고 있다. 글은 처음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홈페이지(dem-labor.org)에 실렸고, 이를 일부 수정·가필하였다.

**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demlabor1848@gmail.com

사적인 유형을 구분하고 19세기 부르주아민주주의혁명과 20세기 민주화이행의 역사적인 경로에 대한 분석을 제시한 후, 한국의 이행 이후 노동자 정치세력화 과정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이행 이후 좌파와 노동의 결합이라는 의미에서 노동계급정치가 제대로 구현되어본 적이 없으며, 그것은 현시점에서 '노동자 정치세력화'라는 노조중심 정치전략을 기각하고 좌파중심 계급정치의 분리 정립 및 가동을 통해서 시작될 수 있다.

주요 용어: 노동자 정치세력화, 좌파노동계급정치, 87년체제, 동맹정치, 노조 정당, 민주노조운동, 자유주의 헤게모니

1. 들어가는 말

한국 노동운동은 1987년 민주화 이행과 동시에 '민주노조' 운동의 등장으로 새로운 정치체제인 자유민주주의와 길항하는 복합적인 관계의 동학에 들어섰다. 신생 민주노조운동은 10년 후 '노동자 정치세력화'라는 기치 아래 노조(민주노총)가 중심이 되는 계급연합정당인 민주노동당을 만들었고, 2004년 국회에 의석 10석으로 진출하였다.

하지만 서유럽 등 전 세계 국가들의 노동정치가 그렇듯이, 이는 노동계급(일부)의 제도정치로의 진출이기도 했지만, 정치체(polity)로의 포섭이라는 이중성을 가진다. 또한, 한국의 경우 노조운동이 의회 진출을 디딤돌로 삼아 만든 제도적인 결과는 미약했다. 노동계급 전체를 보면, 노동권의 전 계급적인 전면적인 적용 확대는 계속 유보됐고, 오히려 1997년 민주 정부에 의해서 본격화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정치와 노동법 개악으로 인해 비정규직 등 노동권의 사각지대는 오히려 늘어났고, 노동계급의 양극화가 본격화됐다.

노동계급 내부에 자리 잡게 된 '노동 차별'과 내부적 위계질서에 대응하여 노동운동은 계급의 정치적 경제적 통일성을 더욱 의식적으로 추구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된 정치방침으로 제시된 이른바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현존하는 '조직화된

노동', 즉 조직노동(organized labor) 중심으로 굳어졌고, 이는 결코 계급정치와 등치될 수 없었다. 한국 사회에서 노동조합 가입률은 이행 이후 초기를 제외하면 계속 10% 내외였고, 그것도 대기업의 경우 80%, 그리고 한국 노동계급의 절반을 차지하는 비정규직의 경우 1~2%인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했다. 또한 무엇보다 노동계급정치에서 핵심적인 문제인 자유주의 정치로부터 독자적인 계급정치의 가동, 노동계급의 정치권력 쟁취 등은 이행 이후 한국 사회에서 독특한 프레임인 '노동자 정치세력화'라는 모호한 단어 앞에서 노동 및 좌파운동의 시계에서 더욱 멀어졌다.

2024년 4월 22대 총선부터 시작해서 2026년 지방자치 선거, 그리고 2027년 대통령선거까지 기간은 한국 사회에서 전례 없는 '정치의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87년 체제의 성격과 한계에 대한 논의가 분분하면서, '체제전환(regime change)'이 시대의 화두로 대두된 만큼, 이 시간은 선거국면과 겹치면서 '전환기'적 성격을 띠기 가능성이 더욱 크다. 하지만 현재대로라면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소위 진보정당들과의 연합을 통해서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구태를 반복되거나 재연될 것이다. 그것도 가장 우경화된 모습으로.

하지만 과연 '노동계급정치'는 무엇인가? 왜 한국은 좌파정당, 계급정당이 아닌 '진보정당', 진보정치의 이름만이 등장하는가? 노동계급정치의 의미를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분별하여 정립하고, 나아가 계급정당을 좌파중심으로 세울 가능성은 이제 정말 일말도 없는가? 지금 논의되는 '체제전환'은 과연 무슨 체제를 어떻게 전환한다는 말인가? 한국에서 좌파 노동계급정치는 정말 늦은 것인가?

이 글은 노동계급정치(working class politics)를 노동자 정치세력화(workers' political empowerment)로부터 개념적으로 실천적으로 분별하는 것으로부터 출발점에 서야 한다는 논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과연 그것이 지금의 현실과 지형에서 가능할지 타진하려고 한다. 정립을 통해서 기계적인 구별을 넘어서려고 한다. 이를 위해서 첫째, 민주노총이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방향을 결정한 과정을 살피고, 둘째 역사적인 자본주의적 민주주의하에서 민주주의 혁명과 민주주의 이행에서 노동계급정치는 어떻게 정립되었는지 비교사적으로 분석하면서 한국의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좌파와 노동계급의 결합으로서 '노동계급정치'의 가능성을 진단하기로 한다.

2. 노조 반대파는 무엇을 해야 했는가

1) 한국 노조운동의 정치적 지형

여전히 “반대세력이 나아가는 것을 저지하는 데서 멈추는 적대적 공생!” 이것이 민주노총이 정치방침을 결정했던, 2023년 4월 24일 임시 대의원대회의 모습에 대한 요약이다. 당시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대대)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직권 상정한 “2024년 민주노총 총선방침(안)”을 단일 안건으로 두고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개최 직전 위원장이 안건을 철회하면서 대의원대회는 무려 70명에 이르는 대의원들이 모여서, ‘표결안건 없는’ 대회를 치르는 아주 특이한 대의원대회가 되었다.

그럼 이 자리는 무엇을 위한 자리였을까? 안건이 사라진 대의원대회였고 대의원대회의 존재 이유인 대표성 있는 표결 절차가 없었던 대의원대회였지만, 이날 대의원대회는 2024년 4월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대한 민주노총의 방침을 사실상 결정한 날이기도 했다. 그것도 표결 없이 가능했다. 구체적으로 이후 드러나는 과정으로 보자면 그렇다.

먼저 민주노총 집행부를 배출한, 민주노총 내 최대 정파인 국민파(전국회의-진보당)는 직권상정 철회를 통해서, 이후 자신들의 정치방침을 민주노총 전체의 ‘공식적인 합의’로 만들어낼 교두보를 마련했다. 고로 이는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였다. 이 대의원대회의 ‘표결 없는 결의’에 따라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중집)는 이후 내부 합의를 거쳐 단일한 정치방침을 대의원대회에 내놔야 했기 때문이다. 4월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위원장 직권상정을 격렬하게 반대했던 일부 중집 성원들은 더 이상 안건 표결 처리를 유예할 명분을 만들어 낼 수 없게 됐다. 민주노총 내 ‘범 반국민파’¹⁾가 이후 개최될 대의원대회에서도 위원장이 낸 정치방침을 극구 반대한

1) 민주노총은 대중조직이지만 그 내부에는 80, 90년대 민족해방(NL)파의 이념적 정치적 계보를 잇는다는 점에서 ‘국민파’로 규정할 수 있고 흔히 ‘전국회의’로 불리는 정파가 다수파이다. 이 정파는 현재 십여 년째 민주노총 중앙 집행부, 주요 산별노조에서 다수파이며, 2023년 중앙과 다수 산별 위원장 선거에서 연속 집권에 성공했다. 현재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도 이 정파 소속이다. 반면 여기서 칭하는 ‘범 반국민파’는 이 최대 정파에 대항하는 나머지 세력들, 정파 그리고/혹은 비정파 소속의 노조 활동가 세력을 의미한다. 이들을 때

다면, 반대만 일삼는, 반대를 위한 반대파로 조합원들에게 낙인찍힐 것이다. 이미 4월 임시대의원대회 때 유튜브 중계 창에서는 이런 논조의 댓글이 쏟아지고 있었다.

반면 앞에서 언급한 범 반국민파 - 이른바 좌파와 현장파, 즉 ‘비전국회의 정파들’-은 임시대대에서 자신들의 반대를 다양한 방식으로 그러나 매우 제한적으로 줄곧 얘기했을 뿐 다른 얘기를 거의 하지 못하고 끝냈다. 적어도 직권상정을 저지했다고 자기만족 하면서 혹은 뭔가 이상하다는 찝찝함을 안고서, ‘최악’을 저지하기는 했지만, 때로는 ‘차악’도 저지했지만, ‘최선’이 무엇인지, 우리가 왜 ‘최선’인지 말하지 않은. 혹은 말할 것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혹은 분명히 인식하거나 실천하지 못한 상태로 말이다. 이 점에서 이 대대에 대해서 민주노총 기관지 《노동과 세계》가 “질서 있는 분위기에서 토론”이라고 보도한 것은 참으로 흥미로운 표현이다.²⁾

이 말은 마치 프랑스혁명 이후 온갖 공화파와 사회주의자들이 득실거리고, 이후 1848년 혁명이 혁명이자 동시에 반혁명으로 치달았을 때, 이 구도에 대해서 카를 마르크스가 구체제(앙시앵 레짐) 대 새로운 체제가 아니라 “질서 대 사회혁명”이라고 표현한 상황을 연상시킨다.

이렇게 2024년 총선과 그 이후 2027년 대선을 앞두고 민주노총 정치방침을 정하는 데 아마 가장 중요한 대회로 기록될 2023년 4월의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는 노동계급정치가 거의 실종하다시피 한 가운데 ‘질서 있는 토론’으로 끝났다: 모든 쟁점은 조직노동의 조직적 질서 속에서 화해적으로 기화될 수 있다는 착각을 남기고서. 그리고 이후 민주노총 중집은 여하튼 단일한 정치방침을 낼 수밖에 없게 되었다. 다음번 열리는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는 싱겁고 형식적인 ‘결집’과 정파와 정당들 간의 가식적인 ‘합의’의 날이 될 것은 이때 기정사실화되었다. 이것이 바로 ‘질서 있는 토론’의 요체였다. 결국, 내부적인 사상적 이념적 적대를 가장하거나

로 현장파, 범좌파로 부르기도 하지만, 현장파, 범좌파로 보기에 너무 광범위하고 이질적이고 다양하므로, 최대 정파인 국민파를 반대한다는 공통점을 묶어서 ‘범 반국민파’로 칭하기로 한다. ‘노조 반대파’는 이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들 중 좌파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호하다.

2)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0=502358> (2023.04.25.).

포장한 ‘공생’의 질서가 승리했다.

2) ‘노조 반대파’가 했어야 할 일

4월 임시대대에서 노조 반대파들은 줄줄이 일어나 위원장의 안건 직권상정을 반대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하지만 의장인 위원장 스스로 총선방침에 대한 안건 표결을 철회하겠다고 발언한 직후에 이게 무슨 실효가 있었을까? 그리고 왜 노조 반대파들은 안건 직권상정에 대한 쟁점을 부각하는 이상의 것을 하지 못했을까? 문제는 이것이다.

이미 개최 전에 ‘긴급 상황’은 종료됐다. 하지만 노조 반대파들은 직권상정에 대한 반대 연서명을 전달까지 하느라 바빴을 뿐 다른 것을 준비하지 못하였다. 이제 안건 상정을 철회한 마당에 대회장에서 주로 직권상정만을 줄곧 비판하는 것은 위원장 흠집 내기로나 보이지 과연 무슨 효력이 있었을까. 혹은 다수파에 소수파에도 일정한 ‘지분’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보였을까.

더구나 안건을 상정하지 않기로 하고, 표결 없는 ‘찬반 토론’에 들어갔는데, 여기서도 이들은 민주노총의 정치방침에 대한 수세적이고 소극적인 논의에 그쳤다. 집권 다수파는 위원장이 이렇게 전체 조직을 위해서 직권상정을 철회했으니, 하나로 뭉쳐 잘해보자고 ‘대승적으로’ 임했다면, 노조 반대파의 발언은 줄곧 민주노총의 최대 정파가 이렇게 패권적이면 안 된다는 지적으로 수렴된다. 이건 결국 직권상정에 대한 재비판이므로 순환적인 논법에 불과했다.

그렇다면 여기서 반대파의 비판 중 핵심인 패권주의에 대해서 살펴보자. 민주노총이라는 노조 조직에서 다수파가 패권적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조직 활동이나 정치에 있어서 누구나 자신의 정치적 당파적 입장을 내세우고 그것을 조직의 방침으로 채택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아니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 노조 반대파는 노조운동의 정치방침을 패권적으로 결정하면 안 되고 “강제 직권상정”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그래서 현 집행부는 인정하고 물러섰다. 그렇다면 노조 반대파의 다음 스텝은 무엇이 될 것인가? 더 이상 싸우지 말고 서로 ‘질서 있는 토론’을 해서 현재 집행부 제안을 위한 분위기 조성으로 끝내는 것인가? 그 입장은 아니었을 것이다. 적어도 노조 반대파는 현장

에서 표결 없는 찬반 토론을 잘 활용하여, 정세에 대한 의견, 노동계급정치에 대한 입장(혹은 ‘노동자 정치세력화’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 그리고 노조와 정당정치의 관계에 대하여, 모호한 원론만 말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정세적인 방향과 내용을 제시했어야 했다. 하지만 노조 반대파들, 좌파나 전투적 조합주의자들은 모두 다음 주장 이상으로 나아가지 못하였다.

첫째, 현 전국회의가 민주노총 내 의사결정 구조에 있어서 패권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문제이며, 둘째, 민주노총은 하나이므로, 극구 분열은 피해야 하고 하나가 되기 위한 토론과 모양을 끝까지 지향해야 하고, 셋째, 정치방침에서 노동자 정치세력화, 아니 노조 중심의 정치세력화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조합원들과 정파 세력은 없다. 과연 그럴까?

흥미롭게도 이는 민주노총 집행부가 계속 보였던 모습이나 주장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반대파의 위와 같은 입장은 어떤 차별성이 있다는 말인가? 특히 이들이 현장파 나아가 좌파라면, 좌파로서 노동정치에 대한 정치적 입장을 소수파로서 더 정확히 드러내고 다수파에 대해 분리 정립하면서, 내부의 사상적 이론적 투쟁을 거쳐 자신의 견해를 관철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러시아 혁명기에 볼셰비키도 소수파로서 영원히 다수파를 넘어서기 위해 절대 패권적이면 안 되고, 우리는 하나여야 한다고 공염불만 외쳐야 했는가? 혹은 아니면 지금 남한의 민주노총 내 ‘노조 반대파’는 다수파에 맞서서 민주노총은 하나여야 한다는 공염불만 외칠 것인가?

과연 이것은 소수파의 정치적 노선과 메시지로써 타당한가? 어쩌면 이런 주장이야말로 전형적으로 다수파가 할 주장인데 소수파가 하는 것 아닌가 말이다. 역사상 어느 나라에서 어느 좌파, 소수파가 처음부터 끝까지 대동단결을 외칠까, 이는 노조 반대파를 향한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이다. 다수파가 아닌 소수파, 노조 반대파가 과연 누구인가를 묻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과연 다수파를 향한 내적 사상 투쟁과 정치투쟁에서 입장을 정립하여, 반대만 일삼는 반대파가 아니라 내용 있는 반대파로 이후 정립 가능할 것인가?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이기도 하다. 정확한 질문이 정확한 답에 이르는 출발점이다.

3) 반대파 주장의 공허함

그럼 이제 이 반대파의 주장에 대해서 몇 가지 논쟁점들을 살펴보자. 지금 순간부터 '악마의 변호인(devil's advocate)'가 되어보려고 한다. 도대체 그러지 않고선 쟁점화도 되지 못한 채 문제는 미궁 속으로 더욱 빠지지 않을까 저어되기 때문이다.

첫째, 다수파가 패권적인 것이 문제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는 맞다. 그 점을 들어 위원장의 직권상정을 비판할 순 있다. 하지만 그가 철회하는 순간 임시 대의원 대회에서 했던 많은 반대파의 말들은 공허해졌다. 아니 직권상정에 대한 '비판' 말고 과연 반대파들의 정치방침이나 실천지침이 있긴 했나 싶다. 그리고 다수파가 다수파임을 방패삼아 정해진 절차를 무시한다면 문제이지만, 패권 추구 자체는 어느 정파나 추구할 것이다.

패권이라는 말이 불편하다면 이렇게 순화해보자. 어떤 정파나 당파든, 첫째 정세적으로 올바른 입장을 부단히 정련해야 하고, 둘째 그 입장을 가진 좌파는 노동계급운동과 결합을 절대적으로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며, 셋째 그 입장을 정치적 프로그램과 전략으로 삼아 다수파가 되기 위한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즉 대중조직인 노조에 대해서도 자신의 정치적 입장으로 정치화하기 위해 애쓰고 조직 내부의 '다수파'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수파가 아닌 소수 정파라고 해서, 계속 소수파로 남을 것인가? 또 다수파가 되기 위한 이념투쟁과 실천투쟁으로 대중을 향하여 나아가지 않고서 어떻게 자신의 견해를 관철할 수 있는가? 반대파의 패권주의 비판은 현 다수파인 전국회의에 대한 비판치곤 옹색하다.

둘째, 민주노총은 하나이므로 분열을 피해야 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도 분열을 피해야 한다는 주장이 1980년대 이후 대동단결을 가장 많이 외쳐왔던 민족주의 우파가 아닌 소위 좌파, 현장파에서 터져 나왔다는 사실이 흥미롭다. 스스로 조합주의(unionism) 내에 머물고 있지 않고서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즉 노동조합을 금과옥조, 지상 최대의 선으로 보지 않는 다음에야, 무조건 단결과 하나 됨을 말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분열 혹은 분리 자체가 아니라 분열을 억지로 만들고, 목표 없이 분열을 일삼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가 아니라 하나가 되기 위한 과정에 있으며, 지금 한 정파의 입장이 절대다수의 입장이 되어 관철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구성면에서도 민주노총 내 조합원들 간에, 산별 업종 간에 ‘내부 차별’과 ‘격차’도 심하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라는 조합주의의 기치 아래 몰아넣는 것은, 다양한 격차와 차별을 축소하는 것은, 노조운동의 조직적 정치적 전략에서도 큰 오류를 범하게 될 것이다. 결국, 경제적인 조건과 산별 업종의 차이는 정치적 실천적 방침의 차이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존재 조건이 다른데 어떻게 정치적인 입장과 실천이 같을 수 있을까? 이런 노조 내적 차별과 차이를 축소하거나 은폐하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라는 말만 되풀이하는 것은 내부의 차별과 이견을 미봉하고 결국 봉쇄하면서 노조운동 내의 암묵적인 위계를 인정하는 것일 뿐이다.

노조 운동가들이 의미 있는 분열을 두려워 말아야만,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만, 민주노총이 계급적 노조로, 나아가 계급적 정치방침을 제대로 갖추도록 만들어 갈 수 있다. 계급의 정치적 경제적 통일성을 더욱 확대해나갈 수 있다. 하지만 좌파 혹은 노조 반대파는 다수파에 대한 반대만 일삼고, 전국회의 등 다수파가 능동적으로 앞으로 나아가갈 때마다 사사사건 발목 잡기를 하고 있다. 만약 이런 식의 비판이 민주노총 다수 조합원의 입에서 터져 나올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따라서 문제는 입장이 없는 것이고, 이런 빈약한 입장 때문에 패권만을 문제 삼는 양상한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셋째, 마지막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어야 했다. 과연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무엇인가? 그리고 과연 정치방침에 있어서 노동자 정치세력화, 아니 더 정확히 말해서 노조 중심의 정치세력화를 당연시하는 것은 맞는가? 즉 이것이 과연 ‘계급적 정치방침’과 동일시될 수 있을까? 민주노총이, 노동조합이 계급정치의 중심이고 계급정당의 행위자가 되는 것이 과연 노동계급의 정치세력화인가?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비판과 지적을 넘어서 능동적으로 해야 했을 발언,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 세 사람이 일어나서 ‘토론’하며 구체화했어야 할 발언은 이것이였다. 아마 그랬다면 ‘안건 없는 대의원대회’, ‘표결 없이 토론하는 대의원대회’는 그렇게 ‘질서 있는 토론’이 될 리도 없었고, 그런 오명을 쓰진 않았을 것이다.

이제 ‘노동계급정치’를 주장하는 좌파는 이에 대한 질문을 과감히 던져야 한다. 물론 이미 조합원들, 그리고 임시대의원대회 현장의 발언자 중에서 슬그머니 이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였고, 이를 둘러싼 이견들이 은근히 드러났다. 그러나 은근히

말이다.

하지만 다수파와 노조 반대파 양쪽은 모두 서로 치열하게 이견을 드러내며 반박할 쟁투의 지점, 아니 예각적인 쟁점화를 해야 할 순간에 이르자, 슬쩍 정면 대결을 거부하거나 피하였다. 반대파가 오히려 이 문제에 대해서 모호하게 대했다. 이른바 패권주의 반대 담론을 통해서 말이다. 하지만 과연 노동계급정치와 분명히 다른 ‘노조의 정치세력화’라는 문제에 대해 노조 내 좌파의 입장 정립과 발언 없이 과연 노조운동의 정치방침을 싸고 현재의 다수파 국민파 집행부를 넘어설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까? 의문이다.

3. 노동조합 정치가 아닌 좌파 계급정치

- 노동계급정치와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같은가?

1) 노동조합이 만드는 정당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시작해 보자. 과연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무엇인가? 그리고 정치방침에 있어서 노동자 정치세력화, 아니 더 정확히 말해서 노조 중심의 정치세력화를 당연시하는 것은 맞는가? 즉 이것이 과연 ‘노동계급정치’와 동일시될 수 있을까? 민주노총이, 노동조합이 계급정치의 중심이고 계급정당의 행위자가 되는 것이 과연 노동계급의 정치세력화 혹은 노동계급정치인가?

역사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조합이 정당을 만든 예들이 있다. 이는 흔히 영미식 경로, 이른바 ‘앵글로색슨의 길’이라고 불리는 역사적 경로이자 사회적 모델이다. 미국의 노조들이 자유주의 정당인 민주당에 자신의 ‘정치적 대표 정당’이 되어달라고 의탁하는 방법이거나 영국에서 노조가 기반이 되어 만들었으나 대리 정치로 귀결된 ‘노동당’이 대표적인 예들이다. 이를 노조가 주도하는 정당 즉 노조-정당(union-party)이라고 칭하고, 흔히 ‘영미식 유형’이라고도 한다. 이는 노조-좌파정당(union-leftist) 관계나 정당 내 노조(union in party)와는 구분되는 유형으로 유용하다(Lipset, 1983; Marks, 1989).

그런데 위의 정당 유형들은 노조와 정당의 관계 혹은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어

정치세력화하는 특정한 경로와 모델일 뿐 아니라, 나아가 한 국가사회의 노동체제, 사회경제체제, 복지체제까지 아우르며 상호 ‘제도적 보충성’을 가지는 특징이 있다. 그러므로 ‘영미식’ 노조정당은 단지 하나의 유형일 뿐 아니라 특정한 정치체제와 역사적인 경로를 가리키기도 한다. 노조의 정치세력화가 노조정당으로 자리 잡을지 아니면 노조와 결합하는 좌파정당일지에 따라, 정치적 하위체제도 사민주의부터 파시즘까지 다양했고, 내부의 노동체제, 복지체제도 연동하여 변화하면서 제도화했다(Ebbinghaus, 1995). 영미식의 유형은 정치체제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이고, 사회체제로는 ‘최소 사회복지국가’ 내지 자유방임적 국가의 성격을 가진다. 이는 사민주의 노동정당을 축으로 한 사민주의 정치체제, 사회조합주의적 노동체제와 결합한 사회복지국가 유형과 구분된다.

이런 유형학적인 차이는 서유럽에서 노동운동과 노동계급 기반 정당의 등장에 있어서 큰 차이를 기반으로 하며, 동시에 이는 이후 노동정치의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영미식 유형의 경우 기원에서 좌파세력이 약한 가운데 ‘조직노동’이, 즉 노조가 정치세력화하여 대중정당의 뼈대를 이루며 시작했지만, 서서히 기존의 부르주아지가 만든 ‘자유당’을 대체한 ‘민주주의 보편정당’이 되었거나(영국), 기존의 보수적 정치엘리트-주로 남부의 인종주의적 지역 정당에 불과했던-의 민주당과 결합하여 조직노동의 배타적 이해를 도모하는 방식(미국)으로 발전하였다(Andersen, 1979).

그런데 민주화 이행 이후 한국의 노동계급, 아니 민주노총 역시 형식적으로는 이미 영미식의 유형인 노조 정당의 길을 시도한 적이 있다. 바로 1997년 민주노총이 창립하자마자 1기 권영길 위원장 집행부가 ‘국민승리21’이란 준 정당을 거쳐 만든 ‘민주노동당’이 일종의 ‘노조 정당(union party)’이었다. 하지만 민주노총 등 민주노조운동은 이 정치전략을 영미식의 유형이라고 보지 않는다, 혹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민주노총은 노조 중심 정치방침을 정하면서도 이를 노조의 정치세력화라고 하지 않고,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라고 혹은 ‘노동계급정치’인 듯 모호하게 일반화해왔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민주노조운동은 대체로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이나 넓게 서유럽의 사회복지국가를 목표로 지향해왔다. 이른바 사민주의라고 불리는 것이다. 노조의 정치세력화라는 면에서 영미식의 길인데, 정치적인

체제 면에서는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사회민주주의 체제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괴리가 있는 것이다. 이렇듯 한국에서 노조의 정치세력화는 노동자의 정치세력화이기도 하고 노동계급의 정치화라는 의미에서 ‘노동계급정치’이기도 했다. 하지만 둘은 역사적으로 엄연히 구분되는 경로이며 조건을 가진다. 구분하지 않는다고 해서 구분이 감춰질 수는 없다.

그렇지만 일단 액면 그대로, 구분하지 않은 채 살펴보자. 민주노조운동 혹은 민주노총 중심의 정치세력화가 결코 영미식의 길이 아니라면, 과연 민주노총은 무슨 수로 자신들의 정치세력화는, 노조가 중심이 되는 정치세력화는 이들 미국과 영국과 다른, 그래서 ‘노동계급정치’일 수 있다고 자임하는가? 혹은 다른 미래를 가져올 수 있다고 자신하는가? 그리하여 최종적인 질문은 이것이다. 과연 ‘조직된 노동’은 노동자의 정치세력화와 등치될 수 있는가? 또 노동자들이 ‘노조’로 조직된들을 정치화하고 정당화한다고 해서 과연 계급정치일 수 있는가? 조직노동은 계급정치의 주체와 동격일 수 있는가? 답을 하기 위해서 이제 왜 애초에 노조운동이 아니라 좌파 계급운동이 자본주의 태동기에 등장했으며, 그것은 어떤 이념적인 정치적인 질로서 구분되며, 나아가 어떤 역사적인 역할을 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노동계급정치의 시작

근대 산업자본주의의 발전과 함께 신흥계급으로 등장한 부르주아지는 정치세력화를 통해서 봉건제하 군주와 토지 귀족들이 독점해 온 ‘정치시장’에 진출을 꾀했다. 그것은 처음에는 프랑스 산악파(자코뱅)처럼 급진 자유주의자들이 급진적인 민주주의 전환을 꾀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기도 했지만, 곧바로 온건 자유주의적 부르주아지들은 프롤레타리아와의 동맹을 통한 민주주의 혁명을 1848년 혁명을 전환점으로 하여 포기했다. 이들 다수파의 견해는 단두대로 가야 할 군주제를 입헌군주제로 변경하여 유지하고, 귀족들과 부르주아지들이 나란히 정치를 논하고 결정하는 ‘의회’를 만들자는 것이었다. 일부 자유주의자들(산악파)은 급진화하여 집권 후 ‘공포정치’를 하기도 했지만, 이는 결국 ‘테르미도르 반동’을 거쳐 입헌군주제하에 토지 귀족과 대부르주아지, 그리고 자유주의 부르주아지가 함께하는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만들었다.

하지만 민주주의 시민혁명의 초기에는 신흥 부르주아지로서는 규모면에서 도시 안에서 커져가던 노동계급(막 ‘프롤레타리아’라는 신조어를 가지게 된 사회집단)의 대중적인 동원과 봉기에서 협조가 불가피했고, 그것이 1848년 혁명을 가능하게 했다(홉스봄, 1962). 민주주의자들은 노동계급을 새로운 부르주아 자유주의 정치질서 안으로 포섭하기 위해 ‘공화주의’라는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민주주의를 제시했지만, 그것은 1830년 봉기나 1848년 혁명이 곧바로 반혁명으로 돌변한 것만큼이나, 자본주의적 계급 불평등과 정치적 불평등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없는 이념이었다.

그리고 공화주의와 온갖 사회주의들을 이념적으로 대체한 것이 바로 1848년 혁명과 반혁명기에 카를 마르크스가 집필한 『공산주의자 선언』에 명료하게 강령적으로 정식화된, 역사적 유물론에 근거한 사회주의, 아니 공산주의 이념이었다. 1789년 프랑스 시민혁명 이후 신분의회에서 부르주아지와 프티 부르주아지 내 급진분파에 불과했던 왼쪽-‘좌파(the Left)’는 이제 공산주의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더욱 구체화하고 급진화하였다. 마르크스가 『공산주의자 선언』에서 온갖 ‘사회주의’ 부류들까지 비판하고 사회주의와 구분되는 ‘공산주의’라는 말을 사용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었다(마르크스-엔겔스, 1848).

이제 좌파, 혹은 마르크스의 용어대로 하면 공산주의자들은 자본주의하에서 ‘형성기’를 거친 노동계급을 한편으로 또 다른 ‘근대적 발명품’이기도 했던 ‘노동조합(trade union)’으로 결집하고 조직하는 과제와 더불어 좌파와 노조의 결합을 통한 계급정치를 실현하여야 한다는, 이중의 과제를 동시에 안게 되었다. 이는 이중적일 뿐만 아니라 동시적 과제였다.

그리고 계급정치를 향한 첫 번째 조건이 바로 자유주의 정치로부터의 독자화였다. 바로 1848년 혁명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 이제 노동계급을 동원하기만 원하는 급진민주주의나 공화주의를 비롯한 온갖 자유주의적 민주주의 이데올로기와 정치를 대체하는 자신만의 계급적 이념을 내세우고 계급정치를 시작하는 것이다.

하지만 자유주의로부터 독자화가 바로 계급정치의 시작은 아니다. 혹은 자유주의로부터 독자화가 반드시 계급정치도 아니다. 이는 단지 노동계급 외부의 자본주의적 정치 이데올로기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노동을 지배하는 자유/시민민주주의에 대한 최소한의 대타적인 정립일 뿐이다. 그 점에서 첫 번째 1789년 프랑스 부르주아 시민혁명, 즉 부르주아(프티 부르주아)가 주도하는 시민민주주의는 당시 부르

주아지 계급과 동시에 출현하기 시작한 계급인 프롤레타리아를 혁명적으로 동원
은 하되, 정치적 계급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것이 보편참정권의 거부, 유산계급
만의 정치로 나타났다. 그들은 이것을 ‘시민’ 민주주의라고 말했다.

따라서 19세기 노동계급의 첫 번째 과제는 부르주아 시민세력, 즉 자유주의로
부터의 독립 혹은 자립이었다. 이렇게 19세기 근대 정치의 형성으로서 민주주의
정치는 부르주아지 시민혁명이 군주제의 철폐도 이루지 못한 서유럽 전역에서 입
헌 민주정으로 ‘미완의 부르주아지 민주주의’로 귀결되어갈 때, 19세기 중반 ‘자본
의 시대’에 이르러 ‘노동계급의 민주주의’라는 새로운 이념의 압박 속에서 민주주
의 자체를 재구성하기 시작하였다(일리, 1989).

여하튼 노동계급정치의 출발점으로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대타적인 자립은
얼마든지 혹은 어느 정도 형식적으로 가능할 것이다. 또 외부적으로는 가능하다.
하지만 그것이 ‘내부적 정립’을 반드시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노동자 혹은 노조를
기반으로 한 정당 설립이 아니라 이념적으로 계급적으로 자유주의정치 이데올로
기와 운동으로부터 독자화가 내부적 정립이다.

앞서 언급한 영국에서 최초의 노조 기반 정당인(즉 좌파가 중심이 되어 노조의 계급
적 부분, 선진적 노동자들을 규합하면서 만든 좌파정당이 아닌) 노동당의 경우가 그렇다.
그들은 당시 유일 정당이던 귀족계급의 보수당, 그리고 노동당 창립 직전에 창당
했던, 온건 부르주아지시민의 정당인 자유당에 대타적으로 정립하여 제3세력으로
나섰지만, 이후 우경화를 거듭하면서 자유당을 대체하는 당이 되었고, 이후 보수당
과 함께 양당정치 구도를 분점하고 있다. 영국의 노동당이야말로 ‘자유-노동
(lib-lab)’의 정당화의 첫 시도이자 성공작이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민주주의 의
회정치라는 이름으로 자본주의를 가장 성공적으로 방어하는 정치체제의 핵심이
다. 해서 역설적으로, 영국의 노동당은 외부적 정립의 성공이자 내부적 정립의 실
패 사례라고 할 수 있다.³⁾

한국의 경우도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이념의 문제를 비껴 나가나 좌파적이지 않
은 이념까지 당연히 포괄할 수 있다. 이를테면 최근 이주노동자에 대해 배외주의

3) 한국에서 일부 신좌파들이 영국 노동당을 노동정당, 심지어 좌파정당이라고 규정하는 것
은 이론적 역사적 근거가 부족하고 현실정치로 봐도 적합하지 않다. 그리고 이런 해석과
입장 자체로도 한국의 계급정치를 바라보는 이념적인 한계와 낙후성이 그대로 드러난다.

적, 국수주의적 현수막을 내건 민주노총의 건설노조 지부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도 ‘노동자(노조)의 정치세력화’와 ‘이제 민주당으로는 안 된다’라는 말에 대해선 동의하고 있다. 또 2023년 국회 보궐선거로 전주에서 당선된 강성희 국회의원처럼, 당선사례로 “민주당 고맙습니다!”라는 현수막을 내걸고도 민주당으로부터 독자화라고 우길 수도 있다. 당선을 위해서, 그리고 전주라는 지역이므로 이런 현수막을 내걸지언정 우리는 노동자(노조)이니까, 노동자 정치세력화이므로 괜찮다는 논리다.

2024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화 이행 이후 30년간의 ‘양당정치’로는 안 된다는 식의 선언이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심지어 민주당과 국힘(국민의 힘) 내 비판세력조차 ‘양당정치’ 극복을 말한다. 하지만 이들이 말하는 ‘양당’이 무슨 양당이고 왜 안 되는가에 대해서는 좌우 천차만별이다. 또 노조운동 안에서는 민주당에 대한 ‘대타적인 독립’을 이제 다들 말한다. 한마디로 격세지감이다. 이제 ‘양당정치 극복’ 담론은 소위 진보정치를 하자고 할 때면 나오는 단골 레퍼토리가 되었다. 하지만 정작 문제는 바로 이 지점이다. 이 지점에서 양당정치 극복의 레토릭은 ‘민주개혁 진보’연합이 되기도 하고 위성정당이 되기도 한다. 또 노동계급정치는 노동자 정치세력화가 되기도 하고, 노조의 정치세력화로 귀결되고 만다.

필자는 자유주의 비판을 꾸준히 해왔다. 한국의 민주화를 ‘노동 배제적인 민주화’의 경로로 규정하고 자유주의 헤게모니의 공고화 과정이라고 설명하면서, 노동계급정치의 시작은 자유주의로부터, 뽀띠 부르주아지로부터 정치적 독립에서 출발한다는 논지를 제기해왔다. 그렇다면 지금의 ‘양당정치 불가론’으로 나타나는 변화의 양상들을 환영해야 한다. 하지만 도저히 환영할 수 없다. 오히려 씁쓸하다. 계급정치의 내용과 방향성이 없는, 혹은 내용과 방향성을 스스로 정립하고 드러내지 않는, 자신의 편이 될 리 없는 외부에 대한 대타적인 정립의 목소리들이 자못 공허하다. 이것은 출발 이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는 출발하기 전에 자기 정립하여야 할 문제인 것이다.

3)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모호함과 자유주의 정치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 노동정치에 대한 노조운동 내 다수의 견해는 이렇게 정리된다. 민주당으로부터 독자화한 노동자 정당을 만드는 것이 노동계급정치다. 그리고 이것을 ‘노동자 정치세력화’라고 말하기도 한다. 또한 계급이라는 말도 삭제한 ‘노동정치’라고도 말한다. 혹은 이들 대다수 중에 또 다수는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노조의 정치세력화’와 등식화한다. 그렇다면 현존하는 양대 노총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조합원들을 정치적 조직적 기초로 한 정당을 만들면 그게 바로 노동(계급)정치이고 노동자 정치세력화라는 것이다.

결국 핵심 단어는 ‘노동자 정치세력화’다. 근데 이걸 과연 무엇인가? 왜 계급정당이라는 말, 노동계급정당이나 노동계급정치라는 말을 극구 피하고 이 말을 사용하는가, 이는 자기 검열의 결과인가? 심지어 이것이 말이 되는지도 의문이다. 즉 계급 없는 노동정당, 아니면 계급으로 형성되지 않은 노동자, 아니 정확히는 노조로 조직된 노동의 정당, 즉 조직노동의 정당을 계급정치라고 말할 수 있는가? 현재 ‘노동자 정치세력화’ 논자들과 노조 중심의 정당운동을 주창하는 이들의 입장은 여전히 모호하게 이 근처 어디를 배회하고 있을 뿐이다.

19세기에 마르크스는 “공산주의라는 유령”을 말했고, “계급투쟁의 역사”를 말했는데, 한국에서는 민주화이행 이후 ‘계급정치’에서 정작 중요한 ‘계급’이라는 단어를 빠지고 ‘노조’가 좌파를 대체하는 정치를 노동정치로 내세우는 것이 현재의 모습이다. 과연 이렇진대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다음 뼈아픈 질문은, 왜 굳이 한국의 노동계급이, 그리고 좌파가 이 조직노동이 만드는 정당에 함께 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물론 이런 시나리오를 가정해 볼 수 있다. 첫째, 예컨대 만약 현재 미국의 경우처럼⁴⁾ 민주당이 조직노동에 대한 폭넓은 개량 정책을 취하거나 우호적인 몸짓을

4) 2024년 11월 미국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집권민주당 바이든 대통령은 2023년 9월 27일 디트로이트에서 파업 중인 미국 자동차노조(UAW)의 피케팅 시위에 참여하여 파업을 지지하고 노조를 격려했다. 유력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도 파업지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렇듯 미국은 ‘노조의 천국’처럼 보인다. 근데 과연 미국이 노동계급의 천국인가? 조직노동은 과연 얼마나 이 체제에 포섭되어있는 것일까? 물론 격세지감이라고 할 수도 있다. 80년대 초 레이건 대통령이 항공관제사 파업을 무자비하게 분쇄하며 현재의 미국 노

취하면서 이른바 ‘자유-노동동맹(lib-lab coalition)’ 전략을 정치적으로 택하게 된다면, 그것은 현재의 노동자 정치세력화나 노조 정치세력화와 얼마만큼 근본적인 차이가 있을까?) 혹은 자유주의 세력이 그렇게 입장을 왼쪽으로 일보 선회한다면 노동자 정치세력화라는 구호는 여전히 살아남을까? 미국의 경우처럼 ‘민주당-민주노총’ 연합이 되지 말라는 법이 있는가?)⁶⁾

물론 현재 지형으로 보면 크게 구도가 출렁이는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그런 일은 한국에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한국의 자유주의 정치를 대표하는 민주당은 민주노총이 만든 혹은 만들려는 정당을 무력화, 약화시키면서 자신들이 친노동 정당이라는 식으로 노동계급 다수를 향해 진격하거나 혹은 진격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노동정책 일부의 ‘개선과 개악’을 반복하면서, 노동계급정치로의 전망을 계속 가릴 것이다. 보수 양당은 현 정당구조를 유지하거나 거대 양당 플러스 군소

동체제를 재구축(안정화)한 이후 미국 노조들은 험난한 - 그러면서 전투성을 조금씩 회복하는 - 시절을 겪었다. 현직 대통령이 파업현장에 나타나 피케팅을 노동자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한국의 ‘탄압받는 노조’와 지지자들이 부러워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것 역시 “계산된, 노골적이고 선동적인 외부 행위자”의 개입이다. 그리고 당연히 이 행위에는 이유가 있다. 바이든 정부는 코로나19 속에서 엄청나게 풀어놓은 ‘헬리콥터 머니’로 인한 유동성 위기, 인플레이션 압박을 임금 상승 유인(압박)과 연계하여 해결하기 위해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노조 파업을 잘 활용하고 있다. 이상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전망과 실천》 2023년 10월 4일 “황제가 노동자 파업을 격려할 때, 제국은 다 속셈이 있다” 참조 (<http://dem-labor.org/?p=5967>). 나아가 이는 “제조업의 국내화(reshoring)”라는 정책적 변화를 시도하는 “조합주의 국가”의 모습이기도 하다. 조합주의 국가란 노동을 포섭해 권력 혹은 자원 일부를 나눠주면서 노동계급운동의 급진화를 막고 그 자체를 국가에 복속시키는 국가인데, 이의 원조 격이 바로 독일 파시즘이었다. 그러므로 이는 대선을 앞두고 “단지 ‘표’를 겨냥하는 ‘정치’만은 아니다. 이 정책적 변화는 미국의 대외전략과 맞닿은 국내 산업전략, 즉 제조업의 국내화, 이른바 reshoring 또는 re-industrialization(재산업화)을 이끌어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한마디로 “노조가 곧 산업정책”(Trade Unions are industrial policy)인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2023년 11월 9일 《전망과 실천》 “중심부와 주변부 국가 노동계급의 파업은 어떻게 다른가?” 참조(<http://dem-labor.org/?p=7331>).

- 5) ‘자유-노동동맹’ 개념에 대해서는 필자의 줄고, 「촛불의 운동정치와 87년체제의 ‘이중전환’」, 《경제와 사회》 117호(2018) 참조.
- 6) 민주노총이 ‘민주’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것은 그 점에서 현재 조직노동의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드러내는 동시에, 이데올로기적 한계를 보여주기도 한다. 이에 대해서는 권영숙, 「민주화 이행 이후 한국 노동운동의 역사적 전환과 시기 구분, 1987-2006」, 《사회와 역사》 115집(2017) 참조.

다당제를 유지할 것이다. 어떻게 되든 노조 정당의 소수 약체화, 나아가 노조 정당의 필폐로 귀결될 것이다.

둘째, 지금 민주노총의 관료들, 조합주의자들, 전투적 조합주의자들이 공통으로 가진 기반처럼, 민주노총이 중심이 된 진보정당을 다시 만드는 방법도 있다. 이것은 영국의 노동당의 경로다. 이는 한국의 경우 전국회의라는 최대 정파와 진보당이 나아가려는 방법이라는 점이 흥미롭다(물론 이 정당은 진보연합이 되기 어려울 것이다). 근데 이뿐만 아니라 현재 활동하는 진보정당들 역시 일제히 민주노총과 연계되는 진보정당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좌파정당으로 나선 노동당(구 변혁당이 진보신당에 통합된)도 결국 이번 2024년 총선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이 방향으로 많이 선회했다. 녹색당, 정의당 역시 '노동 부재'에 대한 비판을 수용해서인지, 아니면 보편정당(catch-all party)로서 투표율의 한계를 경험해서인지 부쩍 민주노총 등 조직노동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그 결과, 2023년 9월 13일 민주노총과 진보당,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 등 4개 정당의 총선방침 합의문의 서명이 가능했다. 그리고 전날인 9월 12일 민주노총은 중앙집행위에서 이 내용을 골자로 한 정치방침을 확정했다. '노조 반대파'가 반대할 명분은 4월 24일 대의원대회에서 반납하였으므로 이미 사라졌다. 그리고 민주노총과 4개 정당의 합의문 서명식 다음날인 9월 15일 임시대의원대회는 재적 대의원 933명 중 770명(82.5%)의 찬성으로 이 정치방침에 대해 '반대 없는 합의'를 이뤘다.⁷⁾

참으로 질서 있는 퇴각에 이어 '질서 있는 합의'가 성사되었다. 그것도 민주노총과 이른바 진보 4개 정당이 만들어낸 정치방침이다. 하지만 이 정치적 합의는 또 얼마나 형식적이고 외교적이기도 하는가. 민주노총과 4당 합의문이기도 하고 민주노총 중집에서 확정한 안이기도 하고 대대에서 통과된 안이기도 한, 이 정치방침은, 2026년 지방선거까지 연합정당 건설을 목표로 2024년 총선에서는 연합정당 건설부터 정책연대, 후보 단일화, 공동 선거운동 등 모든 가능성을 열고 다양한 형태로 총선에 공동 대응한다는 것이 골자다(첨부: "9월 13일 민주노총과 4개 '진보정당'

7) 단지 반대는 한 대의원이 안건 제안문 중 "아래로부터의 힘을 모아내는 방식으로"라는 표현에 대해 "아래가 있다면 위가 있다는 의미"라고 문제를 제기하여 이를 없앴다고 하는 후문이다.

합의문”).

근데 이 합의대로 이들이 선거 정당을 만들지도 영 의구심이 들지만, 설사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노조정당’ 혹은 ‘계급연합정당’을 과연 계급정당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좌파정당이라고 할 수 있을까? 영국의 경우 노조 간부들이 정치인이 되고, 심지어 좌파 블록도 대거 진출하여 노동당 내에 자리 잡았고, 의원내각제 하에서 노동당을 통해서 노조 간부 출신들이 의회에서 정치를 하고 집권도 수없이 했는데 그들이 과연 무슨 ‘노동계급정치’를 했던가? 그것이 ‘노동계급정치’이긴 했던가? 그것 역시 부르주아 민주주의 정치였을 뿐이지 않았던가. 그렇다면 왜 애초에 굳이 노동정치를 독자적으로 구분하였던가. 노동계급의 편에서 구분할 실익이 과연 있는가. 또 경제적 위기와 사회적 위기 때 노동조합이 기반이 된 영국 노동당이 노동-자본의 사회적 관계에서 의미 있는 계급적 포지션을 취하긴 했던가.

노조들이 기반이 되어준 영국 노동당은 결국 앞에서 언급한 대로 부르주아지 일부가 만든 자유당을 대체하면서, 양대 부르주아 정당 중 한 정당으로 그동안 잘 유지되어왔다. 의원내각제하에서 정권도 번갈아 가져갔다. 조직노동(노조)은 그 정당에 노조 간부들을 수혈하여 공급하였고 정치적 조직적 기반이 되었고 물질적인 ‘화수분’이 되었다; 영국의 조직노동은 소속 조합원들만의 배타적 이해를 노동당을 통해서 보호받고 이를 노동정책으로 수립하도록 한다. 하지만 그 정책과 제도가 전 계급적일 리가 없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영국 대처 정부의 신자유주의가 과연 가능했을까.

혹은 영국식의 경로가 아니고 독일식 경로대로 사민주의 정당을 만들고자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목표이자 정당정치의 정체성이라면 지금이라도 분명히 그 노선을 말해야 한다. 애매하게 ‘노동자 정치세력화’라고 말하지 말고, 혹은 “노조주도 연합정당”의 결성이라고 애매하고 말하지 말고, ‘연합정당’이란 말 앞에 붙는 수식어는 분명히 계급이나 노동이 아닌 ‘진보’일 것이다. 그리고 이른바 ‘진보연합정당’은 2026년까지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진보정치의 프로그램일 것이다.

하지만 한국 정치에서 진보는 언제나 무슨 진보인지 분명치 않았다. 분명하지 않은 이념, 탈이념을 표상하는 것이 ‘진보’라는 호칭이었다. 그리고 진보인 척하기 위한 진보, 진보를 자칭하기 위한 진보가 곳곳에 유명처럼 출몰하는 것이 한국의 운동정치와 제도정당정치다. 마치 19세기에 봉건 토지 귀족부터 부르주아, 프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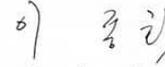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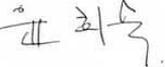
<그림 1> 9월 13일 민주노총과 4개 '진보정당' 합의문

민주노총 - 진보정당 대표자 연석회의 합의문

민주노총과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진보당의 대표자들은 9월 13일 회동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

1. 민주노총과 진보 4당은 노동, 민생, 민주, 생태, 평화를 총체적으로 파괴하고 불평등과 차별을 심화시키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 2024총선에서 모든 진보세력과 함께 단결하여 투쟁할 것이다.
2. 민주노총과 진보 4당은 2024년 총선에서 진보정치 세력의 연대연합 실현을 위해 민주노총 총선방침을 존중하여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총선공동 대응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3. 민주노총과 진보 4당은 거대보수 양당의 선거제도 개혁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2024년 총선이 민심 그대로를 반영하고 보수 양당의 기득권 정치를 타파하는 계기가 되도록 정치제도 개혁 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4. 민주노총과 진보 4당은 노조법 2.3조 개정, 철도 민영화 저지 및 공공성 강화 등 당면한 노동현안에 대한 공동대응 뿐만 아니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및 역사 지우기에 맞서는 것을 시작으로 범국민적 투쟁에 앞장설 것이다.

2023년 9월 13일

노동당 공동대표	이 종 회	
녹색당 공동대표	김 찬 휘	
정의당 대표	이 정 미	
진보당 상임대표	윤 회 숙	
민주노총 위원장	양 경 수	

부르주아들 다양한 정치세력이 ‘온갖 사회주의’를 참칭하고 그래서 ‘진정한 사회주의’라고까지 자신을 주장했던 것처럼, 이 사회, 21세기 남한 사회에서 진보는 과연 무엇인지 갈수록 오리무중이다. 이유는 진보라는 말이 모든 ‘분별’과 ‘정립’을 모호하게 만드는 데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정치적으로 상호 분별할 수 있도록 자신의 정치를 정확히 드러내는 것이 대혼란의 시대에 혼란을 줄이면서 각자 정립하거나 함께 정립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노동자가 정치세력화한다고 해서, 일부 노조 관료들이 정치인이 된다고 해서, 그들이 중심이 되고 노조가 정치적 기반이 되는 정당을 만든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노동계급정치’인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4) 자유주의 정치로부터 독자화 - 차이, 분별, 정립

위와 같은 이유로 자유주의정치로부터 독자화라는 말도 잘못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자유주의로부터 독자화는 단지 민주당이란 자유주의 정당과 조금 다른, ‘진보적인’ 정당들을 외부에 따로 만들거나 노동자들이 더 정확하게는 노조가 정당을 만든다는 의미가 아니라, 말 그대로 한국 노동계급의 정치적 계급적 독자화이다. 그것은 첫째, 한국 노동이, 조직노동으로 구성된 노동이든 뭐든 간에, 계급으로 자신을 주장하고 정치적으로 선언하는 것이다. 둘째, 조직노동이 아니라 계급으로서 정치적 실천을 하겠다는 입장을 정립하는 것이다. 그래서 셋째, 민주주의를 독점하고 주도해온 부르주아와 뺨피부르주아의 정당정치인 자유주의로부터 정치적으로 독자화하여 자신의 계급정치를 시작하는 것이다. 자유주의 정치로부터 독자화는 이 3가지를 모두 포함하는 말이다. 그래서 ‘노동계급정치(working-class politics)’라는 말이 정확해지는 것이다. 마지막 네 번째로 노동계급정치는 의회민주주의와는 다른 정치, 자본주의 철폐라는 최종적인 지향을 가진 정치를 위해서 노동계급의 정치권력 쟁취를 향한 교두보이자 운동적인 쓸모로 ‘의회’와 선거정당을 활용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노동계급정치는 엄연히 구별되어야 한다. 현재의 한국의 좌파와 노동계급운동을 둘러싼 지형으로 보면, 한국의 계급정치는 지

금이야말로 먼저 ‘노동자 정치세력화’로부터 스스로 반정립 되어야 한다. 여기서부터 첫걸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 노동계급정치는 노동자들이 조직노동이 자유주의 정당과 다른 정당을 만드는 형식적인 조직적인 분리가 아니다. 단순히 노동자들과 노동조합들이 형식적이고 물질적인 정치정당을 만들거나 노동자들이 의회로 진출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노동계급정치는 자유주의로부터 내용적 이념적 분리와 정치적 독자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즉 그것은 자유주의 정치로부터 형식적인 독립선언을 하는 ‘제3당’ 혹은 ‘제3지대’를 만드는 의미로 이해될 수 없다. 그것은 노동계급이 자신의 계급적 정치사상을 갖지 못한 채 자유주의와 민족주의로 경도됐던 흐름을 끊고, 노동계급과 노동조합의 외부에서 발현한 사회주의라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와 이론을 자신의 계급적 사상과 정치적 이념으로 삼는, 내용을 갖춘 독립을 말하는 것이다. 나는 여기서 노동계급과 사회주의의 결합으로서 노동계급정치를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2023년 4월 24일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확인한 것은, 이 모든 것에 대해 ‘미정립’, ‘미분별’, 그리고 ‘미분화’였다. 서로 상대의 노선을 열심히 반대하고 찬성하지만, 사실은 찬성하는 것도 반대하는 것도 크게 내용과 메시지에서 차이가 없다. 나아가 9월 14일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는 4월 대의원대회에서 이미 제출됐던 안건에서 차이 없는 ‘노조 정치세력화’의 입장을 그대로 담아냈다. 차이라면 6개월 동안 진보당, 노동당과 정의당, 녹색당 등 4개 정당이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정치전략에 다들 발을 담그기로 한 것이다. 순서도 참 흥미롭게 9월 12일 중앙집행위 단일안 확정, 9월 13일 민주노총과 4개 정당 합의, 9월 14일 임시 대의원대회 표결이다. 그러므로 과연 이를 표결에 의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을까? 4.24 대대의 ‘질서 있는 토론’은 결국 9월 14일의 ‘질서 있는 표결’로 마무리되었다. 그 어디서도 노동계급정치의 방향을 두고, 그 정치이념을 두고, 그 미래의 전망을 두고 격렬한 토론도 쟁투도 없었다. 과연 이렇게 평화롭고 질서만 있어도 될지 걱정스러울 정도이다.

한국의 민주노조운동은 여전히 노동조합을 ‘정치적 기관’으로 혹은 ‘정치적 엔진’으로 생각한다. 기관과 엔진은 있으나 사상과 지도가 없다. 그런데 그것을 노동자주의(workerism)라는 모호한 주의로 대체한다. 노동자주의는 87년 이후 노동 배제적 민주주의라는 악조건 때문에 더욱 강화되었고, 이는 전투적 조합주의를 거쳐

이후 좌파가 아닌 노조가 중심 단위가 되는 정치정당화의 길을 열었고 그것이 민주노동당이였다. 그리고 여전히 현재의 민주노총 등 민주노조운동은 노조중심의 진보정당을 만드는 것을 노동자 정치세력화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것은 노동계급정당이 아니라 노조정당일 것이다. 노동계급정치가 아니라 범계급연합정치일 것이다. 계급정치 없는 진보정치, 그리고 좌파 없는 노조정치일 것이다.

결국,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노조의 경제주의와 정치에서 의회주의라는 쌍날개를 주축으로 한 서유럽의 사민주의식 우경화의 한국식 버전이다. 한국 노조운동의 우경화, 조합주의화는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안주하면서, 계급으로서 정치적 독자성의 실패로 귀결될 것이다. 왜냐하면,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노조 정치세력화로, 나아가 노동자들이 투표소에서 민주당 대신에 찍을, 노동조합 기반의 정당을 하나 만드는 것쯤으로 이해한다면 그것은 여전히 계급정치로서의 독자화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민주노총이 가진 '대표성의 위기'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조직노동의 한계에 간혀 전 계급적인 전망과 통일성을 실현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결국, 계급정치와 좌파의 부재 속에서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는 자유주의 정치의 한계를 넘어서는 독자화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계급정치는 여전히 이렇게 출발선에서 서성이고 있다.

결국 다르지 않으니 분별이 되지 않고,
분별이 되지 않으니 차이가 없어진다.
차이가 없으니, 정립을 하지 못한다.

4. 정치동맹과 노동계급정치: '정치의 해'에 대한 계급적 전망

1) 한국의 진보정당사: 노동 없는 진보정치, 진보 없는 노동정치

한국의 진보정당사는 1987년 이후 패배와 비루함의 연속이었다. 그런데 조금의 세를 얻은 후의 모습은 외려 더욱 최악을 향한 경주 같았다. 이행 이후 노조 정치의 시작이었던 '국민승리21(민주노동당의 전신)'은 민주노총 초대위원장이 위원장 임기조차 채우지 않고서 만들어낸 '민주노조의 정치세력화'이었다. 이렇게 산하 민주노

조들의 동의를 정상적으로 구하는 과정에 기초하지 않은 채 지도부가 주축이 되어 정치방침을 내지르는 관행은 최초의 선례로부터 결국 대세가 되었다. 그리고 성공적인 결과는 이런 결정을 정당화하는 핑계가 되었다.

2004년 민주노동당은 국회의원 10석(곧바로 선거법 위반으로 1석 줄어든 9석)으로 ‘해방 이후 첫 진보정당의 국회 진출’이라는 결과를 거뒀다. 좌파운동과 사회주의 정당을 말살하고 수립한 분단국가 대한민국 정치체제 전체를 통틀어, 그리고 87년 민주화 이행 이후 최초로 ‘노동정당’의 원내 입성이라는 ‘쾌거’가 되었다. 하지만 과연 이 성과는 노동계급정치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 또 이것은 노동계급정치의 시원이라고 할 수 있을까?

먼저 씩씩하게 확인해야 할 것은, 이 성과가 바로 노무현 대통령 탄핵반대 운동, 즉 신자유주의적인 노동유연화와 구조조정정치를 구사하며 대표적인 반노동 정권으로 기록될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움직임에 일부 좌파를 제외한 다수의 ‘진보’세력과 민주노총 주류가 함께했던 이른바 ‘노무현 살리기’ 캠페인으로 만들어진 결과였다는 점이다. 우파정당의 노무현 탄핵 시도가 불발된 이후 분위기 속에서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 결과는 마치 전리품의 공유와 배분과 같은 의미가 있었다.

결국 이것은 이른바 노조정당의 최초 원내 진입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이른바 진보/좌파/노동 그 무엇이든 불리든 간에, 이들과 자유주의 정치세력의 결합 혹은 나의 규정으로 한다면 ‘자유-노동 동맹(lib-lab coalition)’의 명실상부한 시작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해방 후 진보정당의 최초의 의회 진출이라고 일컬어지던 성과의 뒷그림자였다. 그리고 2004년 총선 이후 오늘날까지 진보정치의 흐름과 행로는 그 성공 결과에 대한 무비판적인 해석과 반복되는 재연 실험으로 점철되었다.⁸⁾

2) 민주화 이후 동맹정치

근데 여기까지 언급한 역사는 단지 민주화 이행 이후 ‘진보정당의 역사’일 뿐이

8) 이렇듯 오늘의 정치적 선택은 오늘이 수로 끝나지 않는다, 이는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빛이기도 하고, 나아가 미래의 질곡이 되기도 한다.

다, 정치사회학적으로 엄밀한 의미의 ‘노동계급정치(working-class politics)’는 한국에서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자유-노동 동맹정치 역시 2004년 반노무현 탄핵반대운동 이후 지지부진하였다. 이는 한국의 경우 이 동맹정치 가동에 핵심인 비례대표제 실시에 대한 민주당의 사보타지를 통해 분명히 드러난다. 필자는 한국의 경우 조직노동의 끊임없는 구애 혹은 압박에도 불구하고 자유주의 정치는 노동포섭보다는 중산층을 중심으로 한 자유-시민동맹(lib-civic coalition)에 기초한 범민주연합정치를 고수했다고 본다. 그것의 정치체제적인 성격이 바로 ‘노동배제적인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 without a working class)’의 공고화였다.⁹⁾

하지만 자유주의 정치가 ‘노동을 배제하는 민주주의’를 일관되게 원칙적인 기조로 지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노동운동, 조직노동, 진보정치운동은 자유주의 헤게모니로부터 분리되지 못한 가운데, 정당 차원에서는 계급정당 아닌 ‘진보정당’운동을, 다른 한편 조직노동 차원에서는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조합주의(unionism)와 노동자주의(workerism)에 매달렸고, 좌파-노조의 결합으로서, 좌파중심의 노동계급정치로 전환은 요원하였다.

여기에는 이중의 의미에서 ‘주체’의 문제가 있다: 이른바 ‘민주노조’가 만드는 노동정치의 한계, 그리고 좌파로서 제대로 정립하지 못한 ‘진보좌파’의 문제, 두 가지가 다 문제다. 세계정치사 속에 한국의 사례를 비춰보면 이 점은 더욱 명확해진다. 자본주의 역사에서 대중조직인 노동조합 자체는 좌파 계급정치와 자연발생적으로 결합하거나 보증하지 않는다[이와 관련 ‘외부론(혹은 전위론)’, 그리고 ‘양날개론’ 등 다양한 관계론이 제출되었다]. 특히 한국같이 노동조합운동이 좌파운동보다 과잉 발육되고 좌파운동이 허약한 나라에서는 대체로 노조운동이 노동정치운동을 주도하고 정치운동에 나선 좌파는 약체화되거나 노조에 종속된다. 그에 비하여 조합주의와 노동자주의는 더욱 강화되게 된다. 이는 한국의 87년 이행 이후 민주노조운동에서 확연히 드러나는 점이다. 비교사적으로 한국의 이행 이후 궤적은 노조-좌파 관계의 비대칭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증좌이자 그 사회정치적 경로가 어떻게 현

9) 이상 논지에 대해서는 권영숙, 「한국 자유주의의 한계와 노동좌파의 위기: 87년체제 전환 이후의 방향과 가능성」(2022, 민교협 정치대토론회), 「한국 자유주의의 한계와 연합 정치의 가능성」(2012, 비판사회학대회), 그리고 원출처는 Young-Sook Kweon(2008, Columbia Univ. Diss.) 참조.

실화되는가를 보여주는 사례다. 이 관점에서 87년 이후 노동운동과 노조운동의 역사를 복기해보자.

3) 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노동운동의 자기 전화

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노동운동’은 당시에 폭발적인 ‘노조 드라이브’ 속에서 만들어진 2천여 개의 민주노조를 주축으로 하였지만, 노동자 정치운동 조직들까지 망라하는 의미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노조와 비노조, 조합원과 비조합원, 그리고 나아가 노조와 노동단체, 그리고 변혁적 노동정치운동까지 포함한 광의의 노동운동이었다.¹⁰⁾ 노동자대투쟁 이후 1991년 발족한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에는 민주노조뿐만 아니라 전노협(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등 노동단체들도 가입해있었다. 그러나 전노협을 해산하기도 전인 1993년 사무직업종회의와 대기업 노조들이 주도하여 만든 민주노조 연합체였던 전국노조대표자회의(전노대)는 노조만 가입하는 ‘노조운동’이 되었다. 그리고 이는 이후 전노대를 계승하여 1996년 창립한 민주노총의 조직적 성격으로 굳어졌다. 심지어 민주노총의 산별 조직들은 해고자와 초기업적인 고용 관행에 놓인 노동자들을 포괄하는 문제에 대해 갈수록 소극적이었다.¹¹⁾ 이런 점에서 한국의 민주노조(민주노총)는 노동운동으로부터

10) 이 글에서 ‘노동운동’은 단지 노조 혹은 노조운동으로 한정하지 않고, 노조운동, 정치적 노동운동, 그리고 노동의 정치적 사회적 동맹정치로 넓혀서 보는 광의의 개념이다. 그리고 필자는 ‘노동’ 혹은 ‘노동운동’은 하나의 단일한 전체(entity)이나 통일체 혹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는 시각에서 있다. 즉 “노동운동, 노조운동, 조직노동은 모두 질적으로 구분해야 하는 개념인 동시에, 이들 간의 경계는 상호 유동적이며 시간 속에서 그 질은 변화할 수 있기도 하다. 대체로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 노동운동은 노동3권이 보장되고 노동계급이 자본주의적 민주주의 체제로 제도적으로 포섭되어 가는 가운데 점차 ‘노조운동’으로 일원화되고(혁명운동, 변혁적 정치운동과 분리), 나아가 노동조합원들의 조직된 이해를 배타적으로 우선적으로 대변하는 ‘조직노동(organized labor)’으로 좁혀진다. 하지만 때로 역진적인 방향, 즉 조직노동에서 ‘노동운동’으로 변화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혹은 일국적 노동운동 내부에서 3가지 경향성이 혼재돼 상호 긴장하고 갈등하고 경쟁하기도 한다.” 권영숙, 「민주화이행 이후 한국 노동운동의 역사적 전환과 시기 구분, 1987-2006」, 《사회와 역사》 115집(2017) 참조. 위 인용 출처 286쪽.

11) 그 결과가 박근혜 정부에서 ‘법외노조’ 사태로 터졌다. 하지만 이 문제 이전에도 노조 가입 자격을 갖추지 못한 수많은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서도 배제된 노

노조운동으로 전화를 거쳐, 노조운동에서 ‘이익집단정치(조직노동)’로 자기 전화를 거의 마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이 70년대 이후 흔한 서유럽 노조들의 모습이기도 하다(권영숙, 2017).

하지만 민주노총 내 주류적인 흐름인 이익집단정치 – 주로 ‘사회적 합의주의’라는 모습으로 등장하는 – 에 비판적인 이른바 현장조직들 역시 노동자주의(생디칼리즘)를 강하게 드러내며, 그 결과 노조운동을 정치기관이나 정치적 엔진으로 보기도 한다. 이는 어쩌면 역사적으로 자연스러운 일이다. 비교사적으로 이는 노동의 정치적 채널(노동정당, 노조의 정치 활동의 자유)이 노동의 산업적 채널(노조 결성, 단체 행동, 단체교섭) 등보다 지연되거나 유보됐던 나라들의 특징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앞서 말했듯이, 노동운동, 노조운동 자체는 계급운동으로의 정립이나 좌파의 문제의식을 당연히 보증하는 것이 아니며, 노조와 노동계급은 동일체가 아니다. 이를 두고 ‘계급형성(class formation)’과 계급의 경제적 구성을 구분하는 것이다. 한국 자본주의하에서 성장하고, 87년 이후 조직된 노동계급은 경제적으로 형성되고 조직되었을 뿐, 여전히 ‘계급형성’의 문제를 미완의 과제로 안고 있다.

게다가 남한 사회에서 계급형성은 민주화이행 이후 민주노조운동이라는 대중적 노조운동의 출현을 통해서 출발점에 섰으나, 민주노조운동의 성공이 오히려 계급형성의 문제의식을 희석시키는 ‘의도한 혹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왔다. 한국의 민주화이행 이후 등장한 민주노조들의 재분배투쟁은 70, 80년대 민주화를 거친 어떤 국가들보다 눈부신 임금인상 투쟁의 성과를 냈으나, 이에 대응한 자본의 전략과 국가의 구조조정정치 속에서 정규직 대공장 노동자들의 배타적 내부시장 형성, 전면적인 비정규직 도입, 그리고 이를 위해 기업별 노자 담합 구도를 가져왔다. 그 결과 계급형성을 위한 정치적 경제적 통일성의 기초는 현저히 악화하였다. 경제주의와 노동자주의는 조합주의로 귀결되었고, 그러나 문제는 언제나 조합주의 그 자체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주의’인 것처럼 대표되었다.

하지만 문제의 근원은 눈에 보이는 사회적 합의주의가 아니라 배타적이고 기업별 단위에 묶여 있는 조합주의 그 자체다. 노조가 조합주의와 노동자주의로 머무는 한, 조직노동의 이익집단정치는 언제나 사회적 합의란 이름의 구조조정을 일정

동자들이 ‘민주노총’ 외부에 있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2022년 코로나19 팬데믹에 즈음하여 ‘노동법 밖의 노동’ 문제를 전면적으로 제기하기 시작하였다.

정도 인정하게 된다. 그리고 민주노총 안의 사회적 합의를 반대세력은 실제로 사회적 합의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다. 노정 교섭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노골적인 사회적 합의를 반대하지만, 서유럽식의 ‘사회조합주의’와 시민주의를 기각하지 않는다. 이 모든 것은 조합주의와 노동자주의로 미화된, 조직노동 중심의 이익집단정치를 넘어서야 하는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노동자 정치세력화’라는 정치방침과 ‘양 날개’처럼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있다.

4) 민주화 이행 이후 민주, 진보, 좌파의 관계

근데 위에 언급했듯이 주체 면에서 또 다른 문제는 소위 좌파가 가진 허약한 문제의식과 당파성이 있다. 민주화 이행 이후 한국 좌파의 허약성을 드러내는 단적인 증거는 좌파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정치 없는 정파 세력으로 존립하며 노동계급의 전면적 정치화를 오랫동안 시도하지 않았고, 그런 가운데 정치운동은 스스로 ‘진보’라고 주장하는 정치정당운동으로 분기되었다는 사실이다. 바로 ‘좌파’와 ‘진보’의 애매한 혼용, 그리고 노동과 진보정치의 분열이 그것이다. 좌파는 자신을 ‘진보좌파’로 칭하면서, 진보를 좌파를 포괄하는 외연으로 인정하기 시작하였다.

역사적으로 보면, 80년대에는 ‘변혁운동(자본주의 철폐와 사회주의를 향한 체제변혁을 지향하던 운동)’으로 불렸던 것이 한국에서 좌파였다면, 87년 6월항쟁 이후 정초 선거로 집권한 노태우 정권하에서는 한편으로는 민주 대 반민주 구도가 여전히 강고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민주 대 반민주 구도를 깨고 진보 대 보수의 구도를 만들어 가기 위한 노력을 한 이들이 자신을 그래서 유일한 진보인 좌파, 그런 의미에서 ‘진보좌파’라고 칭하며 자임하였다. 하지만 이후 좌파는 오랫동안 민주 대 반민주의 구도를 무너뜨리거나 약화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갈수록 ‘진보’라는 이름하에 민주세력과 소위 범진보를 형성하면서 수렴되기 일쑤였다. 그리고 그 결과, 역사적인 의미에서 진보는 좌파와 완전히 분리되었다. 이제 한국 사회에서 좌파는 자신을 더 이상 이 사회에서 유일 진보라고 자임하지 않게 되었다. 이제 좌파는 진보의 한 부분이고, 진보는 좌파와 우파를 포괄하는 포괄적인 개념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하여 민주(개혁), 진보, 좌파의 3자의 묘한 동거 체제가 되었다.

게다가 언급했듯이 계급적 좌파정치가 정파운동과 정당정치로 분화하면서 좌파

중심의 계급정치의 가능성은 더욱 요원해졌다. 좌파는 정파로만 존재하고, 계급정당화의 길을 한참 동안 탐색만 하고 뛰어들지 않았다. 그런 가운데 그들은 오히려 민주노조운동에 전적으로 기대는 ‘정파’ 조직들이 되었다. 그들은 민주노총 중심의 노조정당이나 ‘노동자 정치세력화’란 개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고, 민주노총이 노조운동에서 조직노동으로 자기 전화하는 과정에서 보이는 반계급적인 성격, 나아가 노조 내부의 반노동적 행위들 앞에서 침묵하거나 방관하였다. 정파 조직들은 노조 선거에서 패권을 장악하는 데 골몰했을 뿐, 민주노총을 좌파적인 계급적인 노총으로 만들겠다는 정확하고 원대한 계획을 갖고 있지도 않았다. 나는 이런 경향을 보이는, 즉 노조의 조합주의와 노동자 중심주의 앞에서 좌파로서 자신의 독자성도 지도력도 갖추지 못한 채 노조에 의존하거나 기생하거나 독립적이기 못한 좌파를 ‘노조좌파’라고 부르기로 한다.

결국 오랫동안 정당정치가 아닌 정파운동으로서 민주노총 옆에 존속해왔던 현존 좌파 역시 좌파로서 정치적으로 구별 정립하는 데 실패하였다. 심지어 이들 다수는 스스로 ‘진보좌파’ 혹은 진보/좌파라고 두 개의 정체성을 내세우고 있다. 이렇게 좌파는 진보와 스스로 분리하면서 진보와 연합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과연 한국에서 진보와 좌파는 분리될 수 있는가. 아니 한국 자본주의 안에서 좌파 아닌 ‘진보’가 성립 가능한가? 지금 한국의 좌파는, 스스로 자신을 좌파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이 질문에 대한 자신의 주장 아닌 정체성부터 명확히 정립해야 할 과제를 지니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정치운동의 분화를 보면, 87년 민주화 이행 후 진보정당운동은 노동의 문제설정이 치열하지 못한 채, 지식인과 학자들과 정치권으로 들어간 구운동권들(소위 386)이 노조운동과 독립적으로 진행해왔다. 그래서 이들 중 일부는 ‘강단 좌파’ 혹은 ‘시민적 좌파’라는 성격을 탈피하지 못하고, 현장 노동과의 연계도 사실 부실하다. ‘진보’정당들 역시 마찬가지다. 90년대 초 진보와 좌파가 하나였던 시절을 거쳐 이제 ‘진보’라는 외연은 갈수록 넓어지고 막연하지만, 이 문제는 소위 진보진영 역시 마찬가지다. 그들은 모두 제도정치, 의회정치에 관심을 가진다, 하지만 ‘노동정치’에 대한 관심은 부족하다. 진보정당들은 노동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노동 현장과 일상적이고 조직적인, 그리고 투쟁적인 결합력도 약하다. 그런 진보정당 세력이 어떻게 노동에 대한 좌파적, 진보적 지도력을 갖추겠는

가. 그들 역시 선거 때만 나타나서 표 달라고 한다는 점에서 자유주의 정당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심지어 민주노총 초대위원장이 만든 국민승리21, 그리고 후신인 민주노동당은 노조 기반 정당이고, 당내에서 노조(민주노총)가 가장 강한 발언권과 지분을 행사했지만, 그 정당도 ‘노동’ 없는 진보정당 중 하나가 돼버렸다.

사실 이 점에서 민주노동당의 사례는 흥미롭다. 노조 기반의 정당, 사실상 조직 노동이 주축이 되어 만든 정당이지만, 이 정당이 노조와 노동계급을 대변하는 계급정당인가는 그 강령과 활동방식, 의정 활동 등 여러 면에서 의문이 제기된다. 노동자 농민 뿌띠부르주아지를 포함한 계급연합정당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할 듯하다. 여기에는 NL(민족해방) 계열, 즉 민주노동당의 창당 이후 점차 다수파가 된 ‘국민파’가 지닌 ‘민족문제’와 노동문제의 결합에 대한 모호한 입장 탓도 있다. 예컨대 이들은 김대중 정권이 비정규직을 양산하여 오늘날 한국 노동계급 상태를 만든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정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해 우호적인 ‘햇볕정책’을 이유로 ‘김대중 퇴진’에 끝까지 동의하지 않았다. 또한, 그 과정에서 심하게 의회주의 정당으로 변질하면서 현장과의 결합이 현저히 약해지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민주노동당이 내세워 가장 대중적인 인기를 끌었고 스스로 가장 중요시했던 정책 강령인 ‘무상급식’, ‘소상인 살리기’, ‘금리 낮추기’ 등이 어떻게 노동 강령일 수 있는가? 반면 노동시장 개혁에 대한 대안, 정리해고 및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강령, 나아가 노동계급과 연계된 조세개혁, 부동산개혁, 교육개혁 등이 체계적으로 있었는가? 심지어 김대중 정권 이후 연속 집권한 노무현 정권의 비정규직 도입 과정과 노동법 개악에서 민주노동당이 보인 갈지자 행보는 과연 노조 정당의 의회주의 활동에 어떤 기대를 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했을 뿐 아니라, 이 정당이 계급정당으로서 한참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를 할 수 있겠다.

요약하면 민주화 이행 이후 민주주의 정당 정치사는 겉으로 보면 ‘노동 없는 진보정치, 진보정치 없는 노동’의 역사다. 그 초창기에는 노조가 주도한 정당 설립의 문제가 두드러졌고, 그 과정상에는 진보정당에서 노동 부재의 문제가 심각하였다. 그리고 지금은 둘 다 문제다. 결국, 지금 ‘때늦은’ 노동정치의 시작과 ‘때 이른’ 진보정치의 몰락이라는 문제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¹²⁾

12) 2024년 4월 10일 22대 총선 결과가 그렇다. 22대 총선에서 민주노총이 4대 정당과 끌어낸 합의와 민주노총이 대의원대회에서 통과시킨 정치방침은 민주노총에 의해 가장 먼저 훼손

5. 계급 없는 진보정치, 좌파 없는 노조정치를 넘는 노동계급정치

최종적으로 그동안 진보와 노동이 서로의 존재 부재로 인하여 고통받았지만 사실 ‘노동 없는 진보정치와 진보 없는 노동정치’의 표면을 걷고 보면, 정작 시야에서 영영 사라지고 있는 것은 조합주의와 조직노동을 넘어서는 ‘계급’의 문제의식, 그리고 진보와 노동자주의 양자를 뛰어넘는 좌파의 이념적인 지도력(헤게모니)과 계급정치의 전망이다. 결론적으로 정치적으로 ‘계급정치 없는 진보정치, 그리고 좌파 없는 노조정치’라는 두 가지 정치세력화의 방식만이 쌍생아처럼 나란히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양쪽 어느 것도 좌파 중심의 계급정당과 계급정치는 아니다. ‘진보정치’라는 단어 앞에 아무리 여러 새로운 주체들, 즉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민주진보세력의 정치세력화를, 시민운동의 정치세력화를, 그리고 기후위기 동맹의 정치세력화를 붙이고, 심지어 이제는 그 모두를 버무린 ‘민주개혁진보’ 연합을 붙인다고 한들, 그것은 현존하는 자유주의 헤게모니를 넘어서지 못한다. 이 단어들, 즉 민주, 개혁, 진보는 이미 오랫동안 자유주의 정치 안에 포섭된 ‘기표들’일 뿐이다.¹³⁾

그 점에서 2024년 4월 10일 총선 직전에 민주당이 위성정당으로 내세우며, 진보정당 일부와 ‘시민사회’를 끌어들어서 만든 정당의 이름이 ‘민주개혁진보연합’(가칭)이라는 것은 참으로 흥미롭다. 위성정당 이름마저도 민주, 개혁, 진보 3가지를 모두 끌어들인 정당 이름으로 지었다. 그렇게 민주, 개혁, 진보의 3자가 함께하는 ‘민주대연합’의 구도하에서 민주당이 ‘만형’이 되어 구사하는 자유주의 헤게모니하의 민주개혁진보정치, 바로 이것이야말로 자유-노동동맹(lib-lab coalition) 정

되었다. 민주노총은 4대 정당들을 견인하여 총선을 대비한 ‘정책연합’이나 ‘선거 정당’을 구성하는 데 실패했을 뿐 아니라, 민주당이 주도하는 위성정당에 진보당이 합류하는 데 대해서 제재를 가하지 않고 끝까지 선거를 치러내 민주당이라는 자유주의 정치의 헤게모니를 인정하고, 민주, 진보, 좌파의 3자 정립에서 민주와 진보의 통일, 나아가 자유-노동동맹의 최악의 모습을 연출하였다. 이는 엄밀한 역사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13) 따라서 소위 ‘386’정치는 독점적인 자유주의 헤게모니의 한 부분일 뿐이다. 왜 자유주의 비판이 아니라 386 비판이 득세하고, 자유주의 정치에 대한 비난이 이들에게 집중되는가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일이다. 한동훈 국민의 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10 총선을 앞두고 ‘386 운동권 정치 청산’을 신랄하게 비판하였지만, 그는 사실 헛방망이질을 했을 뿐이다. 그리고 그게 바로 보수우파와 자유주의 정치가 공생관계임을 보여주기도 한다.

치라고 할 만한 것이다(권영숙, 2012).

하지만 필자의 우려 섞인 논지가 현실에서 가시화되기까지 12년이 흘렀다. 이는 그만큼 민주화 이행 이후 민주당으로 대표되는 자유주의 정치는 민주화의 효과를 독식했고, 노동자들의 정치적 진출을 시종 제한하여도 문제없었으며, 자유주의 헤게모니하 범민주연합을 구축하는 데 곤경을 겪지 않았고, 따라서 동맹정치의 외연을 노동에까지 넓히는 노력을 기울이는 데 급할 것이 없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보수 이념 일색의 양당 정당정치에서 새로운 정치세력, 소수 정치 세력에게 자리를 만들고 유권자들의 지지율을 왜곡 없이 반영하기 위한 선거법 개혁은 한없이 지연되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정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제는 선거 치르기 직전에 보수 양당의 담합과 급조를 통해서 누더기처럼 개정되고 실행되어온 것이다. 이리하여 비례대표제라는 제도마저도 이용하면서, 이전 민주화 이행 이후 20년간 우파정당과 자유주의 정당의 보수 양당 담합 구도는 이제 보수 거대 양당 + 군소 정당들이 할거하는, 무늬만 다당제 구도로 자리 잡게 되었다.

지금엔 물러설 자리가 없다. 좌파는 부존재의 위기를 겪고 있다. 이제 한국의 좌파세력은 ‘계급 없는 진보정치’를 벗어나는 계급정치와 계급정당을 세우고, ‘좌파 없는 노조정치’를 벗어나는 좌파 중심의 계급정치를 세워야 할 때다. 자유주의 정치로부터 독자적인 한국의 노동계급정치(working-class politics) 시작은 여기에 달려있다. 그러기 위해서 출발점은 탈이념적이고 계급적인 방향이 모호한 ‘노동자 정치세력화’라는 정치전략을 기각하고, 좌파와 노동계급의 결합으로서 노동계급정치를 정립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그리고 계급적 관점의 좌파정치가 바로 설 때야말로, 비로소 87년체제 이후의 체제전환(regime transformation)을 모색하고 자본주의 철폐를 향해 나갈 수 있는 실질적인 힘의 구성과 사회계급 간 동맹정치도 가능해질 것이다.

(2024년 4월 11일 투고, 5월 6일 심사, 5월 22일 게재 확정)

□ 참고문헌

- 권영숙. 2012. 「한국 자유주의의 한계와 연합정치의 가능성」.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원 학술대회 “한국의 계급정치” 발표문.
- _____. 2017. 「민주화 이행 이후 한국 노동운동의 역사적 전환과 시기 구분, 1987-2006」. 《사회와 역사》 제115집.
- _____. 2018. 「촛불의 운동정치와 87년체제의 이중전환」. 《경제와 사회》 117호.
- _____. 2020. 「한국 노동권의 현실과 역사: ‘노동존중’과 노동인권에서 노동의 시민권으로」. 《산업노동연구》 제26권 제1호.
- _____. 2022. 「한국 자유주의의 한계와 ‘노동좌파’의 위기」. 민교협 “2022년 대선 지선 권력재편기에 대응한 대토론회”(2022.2.9.).
- 민주노총. 2001. 『민주노조 투쟁과 탄압의 역사, 1970-2000』. 민주노총.
- 홍스봄, 에릭. 1998. 『혁명의 시대. 1789-1848』. 정도영, 차명수 옮김, 한길사.
- _____. 1998. 『자본의 시대. 1848-1875』. 정도영 옮김, 한길사.
- _____. 1998. 『제국의 시대. 1875-1914』. 김동택 옮김, 한길사.
- 임영일. 1998. 『한국의 노동운동과 계급정치(1987-1995)』. 경남대학교 출판부.
- 전국노동조합협의회 백서 발간위원회. 1997. 『전노협 백서』 1-13권, 도서출판 전노협.
- 일리, 제프. 1989. 『THE left 1848-2000: 미완의 기획, 유럽 좌파의 역사』. 유강은 옮김. 뿌리와 이파리.
- 최장집. 1997. 『한국의 노동운동과 국가』. 나남출판.
- 마르크스, 칼·엔겔스, 프리드리히. 1848. 『공산주의자 선언(Communist Manifesto)』.
- Andersen, Kristi, 1979. *The Creation of a Democratic Majority, 1928-36*. University of Chicago(이철희 옮김, 2019. 『진보는 어떻게 다수파가 되는가』. 후마니타스).
- Bellin, Eva. 2000. “Contingent Democrats: Industrialists, Labor, and Democratization in Late-Developing Countries.” *World Politics*, Vol.52, Issue 2.
- Ebbinghaus, Bernhard. 1995. “The Siamese Twins: Citizenship Rights, Cleavage Formation, and Party-Union Relations in Western Europe.” in Charles Tilly, ed. *Citizenship, Identity and Social Histo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Esping-Anderson, Gosta. 1992. “The Emerging Realignment Between Labour Movements and Welfare States.” in M. Ragine (ed.), *The Future of Labour*

- Movements*. London: Sage.
- Korpi, Walter. 1983. *The Democratic Class Struggle*. Routledge.
- Kweon, Young-Sook. 2008. *Liberal Democracy without a Working Class?: Democratization, Coalition Politics, and the Labor Movement in South Korea, 1987-2006*. Columbia Univ. Diss.
- Lipset, Seymour Martin. 1983. "Radicalism or Reformism: the Sources of Working-class Politic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77, Issue 1.
- Luebbert, Gregory M. 1987. "Social Foundations of Political Order in Interwar Europe." *World Politics*, Vol.39, Issue 4, pp. 449-478.
- _____. 1991. *Liberalism, Fascism, or Social Democrac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Mann, Michael. 1995. "Sources of Variation in Working-Class Movements in Twentieth Century Europe." *New Left Review*, Vol. 212.
- Marks, Gary. 1989. *Unions in Politics: Britain, Germany, and the United States in the Nineteenth and Early Twentieth Centurie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O'Donnell, Guillermo. 1992. "Transitions, Continuities, and Paradoxes." In *Issues in Democratic Consolidation: The New South American Democracies in Comparative Perspective*. ed. Scott Mainwaring, Guillermo O'Donnell and J. Samuel Valenzuela.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pp. 17-56.
- Pizzorno, Alessandro. 1978. "Political Exchange and Collective Identity in Industrial Conflict." in Colin Crouch and Alessandro Pizzorno. eds. *The Resurgence of Class Conflict in Western Europe since 1968*. London: Macmillan. Vol. II.
- Silver, Beverly J. and Giovanni Arrighi. 2001. "Workers North and South." *Socialist Register*, Vol.19.
- Tilly, Charles. 1995. "Globalization Threatens Labor's Rights." *International Labor and Working Class History*, 47, pp. 1-23.

Leftist Working-Class Politics Beyond 'Worker's Political Empowerment: New Concepts and Prospects for Class Politics since the 2024 General Election in South Korea

Young-Sook Kweon

This article raises the issue of workers' political empowerment and/or labor politics in the democratic polity after the year 1987 democratic transition in South Korea, and suggests to reject the concept of workers' political empowerment, which is not only unscientific and ambiguous, but also fails to contain the class perspective and direction, and to adopt the concept and strategy of 'working class politics'. That is, systematic connection between class union movement and the left ideology should be pursued.

Looking into the historical trajectory of workers' political empowerment project, the concept of the 'leftist' has become weak or disappearing in the midst of a dubious nexus and overlapping of 'the democratic', 'the progressive', and the 'leftist'. The democratic union movement since mid 1990s has persisted to realize the workers' political empowerment strategy based on ambiguous embracing of parliamentarianism and unionism, and as the consequence, the task of 'class formation' has been lost somewhere.

Therefore, in the course of 'election years' from 2024 to 2027, the working class politics should not be just a re-enactment of the second Democratic Labor Party by re-creating a kind of progressive coalition party outside the liberal (Democratic Party). The task of independence from liberal politics and liberal hegemony would also be a feasible goal only when the frame and strategy of worker's political empowerment is discarded and the direction towards 'leftist class politics' is clearly embodied. This is not only because the political empowerment of workers means only the political empowerment of organized labor, and it has just re-enacted the characteristics and limitations of existing organized labor. But also because it is not a suitable frame that can accurately

guarantee the independence from liberal politics in that it is a concept, which is de-ideological and class-insensitive. In conclusion, there has never been a working class politics as a combination of the leftist and labor unions since the democratic transition in 1987, and it can only be started through the immediate rejection of the union-centered political strategy of workers' political empowerment and instead, realizing leftist-centered working class politics in Korea.

Key words: Leftist Working-Class Politics, Worker's Political Empowerment, 87 Regime, Coalition Politics, Democratic Union Movement, Liberal Hegemony, Union party